

무주택자 위한 '디딤돌' 한도 축소 '저금리 대출' 수요로 부채 더 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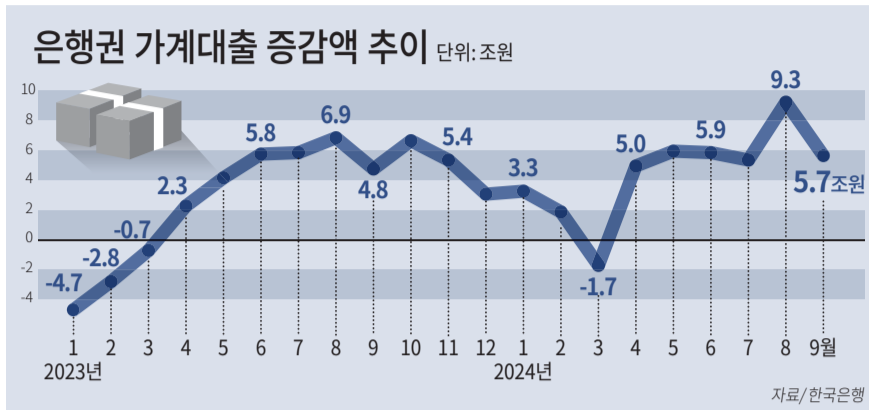
국토부, 수도권 한도 축소 검토
서울권 중심 대출 문의 급증
"1년정도 유예기간 충분히 뒤야
매매수요 급증하지 않을 것"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일부 지역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지만 저금리 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부채가 되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열혈사이 입장을 세차려 바꿨다. 지난 14일 디딤돌 대출



을 줄이겠다고 한 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18일 시행을 유보했다. 23일에는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책 대출 규제가 확실시되면서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유예기간 방침이 나오자 서울권 중심으로 매매 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을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내년쯤 주택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한도가 축소되기 전 대출을 받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으로 5~6조원대를 유지하다 8월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전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서민 실수요 지원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나머지 금액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며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 매매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여야, 오늘 '2+2 회동'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갖는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지난 여야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미래먹거리·자산시장 밸류업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다룰 듯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 상정' '반도체 특별법' 성과에도 관심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 내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 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야당은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이 핵심 골자인 특별법을 내놨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니 만큼,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美에 국가채무 증가세 억제 정책 소개

최상목 부총리 워싱턴 D.C. 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국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역동 경제와 구조개혁 등이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을 언급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세계 국제지수(WGBI) 편입도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기업 맞춤 성장 코칭
능력개발전문주치의

우리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찾고 계신가요?
HRDoctor가 기업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을 처방해드립니다

다이렉트 기업진단 해보세요!

04

훈련 실시·피드백

01

기업진단

03

훈련과정 개발

02

훈련컨설팅